

 국토교통부		보도 설명 자료	
		배포일시	2020. 3. 18(수) / 총 2매(본문 2)
담당 부서	도시교통과 택시산업팀 신교통개발과	담당 자	·과장 박준상, 팀장 오송천, 서기관 박효철 ·☎ (044) 201-3817, 4770, 4756
보 도 일 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여객자동차법 개정으로 더 다양하고 더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이 가능해졌습니다.

<관련 보도내용(매일경제, 3.18(수)) >

- ◆ ‘폐업’ 타다 500억 손실인데...“더 많은 타다” 나온다는 국토부
 - 국토부 “모빌리티 업계 혁신 가속화 발판 마련” 자화자찬
 - 이재웅 “타다 금지하고 수많은 타다? 국민 조롱하나? 분노

- ☐ 지난 3월 6일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‘모빌리티 혁신법’입니다.
- ☐ 이번 여객자동차법 개정은 지난 1962년 제정 이후 이어진 버스, 택시 중심의 여객운송을 확장하여 ‘플랫폼 운송’이라는 새로운 업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 - 첨예한 갈등과 사회적 논란에서 벗어나 새롭고 안정적인 법적 기반 하에서 플랫폼 기업은 더욱 과감하고 혁신적인 시도를 할 수 있으며, 공정한 경쟁을 통해 다양하고 질 좋은 서비스가 계속 등장할 수 있습니다.
- ☐ 특히,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렌터카를 통한 차량조달도 가능해지므로 법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없이 사실상 현재의 영업방식과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.
 - ‘타다’의 경우도 1년 6개월 간의 유예기간 동안 현재 방식 그대로 영업을 가능하며, 법 시행 후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전환하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.

- 실제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‘파파’, ‘택시’ 등 업체도 앞으로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를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.
 - 이번 법 개정안이 ‘타다 금지법’이 아니라, 렌터카 기반의 서비스도 제도권으로 명확히 수용하여 ‘혁신의 場’을 열어주는 ‘모빌리티 혁신법’으로 규정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.
- 현재 수많은 모빌리티 업체들이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과 투자유치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.
- 이제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진정한 제도화의 완성을 위한 하위법령 후속논의를 바라고 있습니다.
 - 정부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기여금, 총량관리 등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들을 개정법률 시행까지 남은 **향후 1년** 동안 업계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입니다.
-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이 더 창의적이고 더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면서 국민들에게 더 많고, 더 다양하고, 더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택시산업팀 박효철 서기관(☎044-201-475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